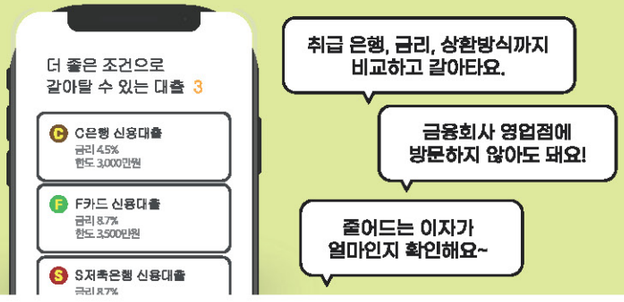
갈아타면 내려가니까!

더 간편해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신용대출(人)

아파트 주택담보대출(1채 人)

모든 주택 전세 대출(1채 人)



더 간편해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은 대출비교 플랫폼 앱,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보험, 캐피탈, 카드) 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 | (04637)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fis.kr

ISSN 2508-8971

제2권 나라재정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1

재정 INSIGHT
권두언
'낮은 길'에서 '높은 길'로!

재정 NOW
FOCUS 재정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재정 STORY
재정, 그땐 그랬지
지난 50년, 향후 50년

2024 January
Vol.85

한국재정정보원

CONTENTS

재정 INSIGHT

04 권두언
'낮은 길'에서 '높은 길'로!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06 재정 칼럼
2024년 정부예산과 향후 재정운용의 과제
-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2024 경제정책방향과
새로운 경제팀의 3대 과제
-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14 정책연구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기반한 재정성과
정보 관리 활용 방안
- 박정수 부연구 위원

재정 NOW

18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20 FOCUS 재정
2024년 경제정책방향

22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재정 STORY

34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40 재정, 그땐 그랬지
지난 50년, 향후 50년
- 배국환 (전)기획재정부 제2차관

46 일상 속 경제·재정 이야기
펫코노미와 구독경제;
보유 효과만 노리면 손절을 당한다
- 조원경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8 문화로 보는 재정 이야기

50 재정 캘린더

52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54 애독자 코너

월간 나라재정
2024 JANUARY VOL. 85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559

‘낮은 길’에서 ‘높은 길’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새해가 밝자마자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선진 문명권과 전체주의 진영의 갈등이 격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일본 지진을 필두로 폭설과 폭우로 두 쪽 난 유럽 등 지난해에 이어 기상 이변이 속출할 태세다. 서해 포사격 도발 등 북한의 호전성은 강도를 더해 가며 남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국회가 방탄, 탄핵과 특검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에 야당 대표의 목숨을 노린 테러까지 일어났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숨 가쁘게 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디지털 대전환과 지구 온난화의 세 가지 흐름이 뚜렷하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비혼(非婚)과 저출산 추세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 머지않아 유례없는 인구 충격과 재정수요 폭주가 점쳐진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 노력에도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9%로 위험수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와 기업을 포함한 총부채도 선진국 중 유일하게 상승할 전망이다. 가파른 인구 변화에 발맞춰야 할 교육, 노동, 연금, 이민 등 구조개혁은 아직 큰 틀의 변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예전엔 다른 나라보다 앞섰던 디지털 전환과 진화도 더디다. 인터넷 속도의 비교우위는 사라졌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이 저조하다. 공유, 개방과 융합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가 취약해 산업 간 혁신의 파급효과도 낮다.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탄소 생산성은 낮고, 탄소배출권 값은 너무 싸다. 게다가 경제주체의 힘을 모으기는커녕 온 나라가 사분오열(四分五裂)되어 규율과 기강이 느슨하며,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일상처럼 됐다. 남녀·노사·세대 간 갈등에 최근엔 교사와 학부모의 다툼까지 가세했다. 대중 영합 정치와 정쟁이 기승을 부리고, 편 가르기와 종족주의, 거짓과 위선, 가짜 뉴스와 프레임 씌우기가 만연하다. 사기와 무고(誣告)가 크게 늘고, 노력보다 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아졌다. 느슨한 기초질서, 희박한 공민의식, 허술한 직업윤리, 얄팍한 상술 등 국민 개개인의 각성이 절실한 사안이 수두룩하다.

국민소득, 교육 수준과 기대수명 기준으로는 선진국에 들어섰으나, 번듯한 문명국가로 발돋움하려면 바로잡아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자면 지금처럼 불신과 배제, 강제와 감시, 처벌과 반목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낮은 길’에 매몰되어선 안 된다. 존중과 포용, 자율과 독려, 자성과 배려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높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 위정자들이 앞장서야 하지만, 『나라 재정』의 독자인 지식인과 전문가도 책임을 통감하고 빨셈이 아닌 덧셈, 나아가 곱셈이 되는 숙의와 공론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반론을 경청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공화’와 ‘협치’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 건전성은 세대 간 약속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위기와 우발 사태에 대비하는 최후 보루다. 국채 이자와 복지지출 등 의무 지출의 비율이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면, 재정 건전성 확립은 요원해진다. 모두 힘을 합쳐 달콤한 선심 정책과 이설픈 날림 공약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당장은 금단(禁斷) 현상 등으로 저항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보모(保姆)국가’의 군살을 빼고 정부는 균등한 기회 보장과 공정한 질서 확립에 주력해 민간의 자율과 분권,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게 정공법이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창의(倡義)했던 의병의 각오로, 비관과 자조(自嘲) 대신에 희망과 자신감으로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새해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낮은 길’을 떨치고 ‘높은 길’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거룩한 여정에 신의 축복과 가호가 깃들기를 기원한다.

2024년 정부예산과 향후 재정운용의 과제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2024년 예산을 건전재정기조의 유지, 재정낭비요인 차단과 재정정상화,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의 기본방향 하에서 편성하였다. 또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효율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심의를 통해 예산은 656.6조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불과 2.8%의 역대 급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이 3.6%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실질예산은 전년 대비 축소된 것이다. 이를 두고 최근의 경기상황과 사회복지 등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세 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불만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세, 세계경제의 성장률 저하 등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과 불확실성 하에서 재정여건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세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높은 우려를 반영할 때, 안정적인 재정관리 하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견지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24년 정부예산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며,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2024년 정부 예산 (단위: 조원, %, %p)

		'23년 예산 (A)	'24년 예산[1] (B)	증감 (B-A)	
				금액	증감률
총수입 및 총지출	총수입	625.7	612.2	△13.5	△2.2
	국세 수입 (세수 재추계)[2]	400.5 (341.4)	367.4	△33.1 (26.0)	△8.3 (7.6)
	국세외 수입	225.2	244.7	+19.5	+8.7
	총지출	638.7	656.6	+17.9	+2.8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58.2 (△2.6)	△91.6 (△3.9)	△33.4	△1.3
	국가채무 (GDP 대비)	1,134.4 (50.4)	1,195.8 (51.0)	61.4	+0.6

주 : 1) '24년 예산은 국회 확정 예산 기준
2) '23년 9월 기재부에서 세수를 재추계한 값
자료 : 기획재정부, 2024년 정부예산(안), 2023. 8.
기획재정부,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계획, 2023. 9.

'24년 정부예산에서는 몇 가지 점이 주목을 끈다. 첫 번째는 총수입에서 국세수입 예산 부분이다. '23년의 경우 세수결손에 대한 논란 끝에 재추계한 국세수입은 본예산 대비 59.1조원이 축소된 341.4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4년 예산의 국세수입 367.4조원은 재추계한 전년도의 국세수입에 비해 7.6%(26조원) 증가한 것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세로 접어들었던 2010년 이후 국세수입이 예외적으로 급증했던 2021과 2022년을 제외하면 2010~2020년 기간 중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4.9%였으며, 명목GDP는 연평균 3.9%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세수탄성치의 평균적인 수준은 1.3 미만으로 볼 수 있다. '24년의 명목GDP 성장률을 4.9%로 전망한 것은 기저효과를 반영할 때 수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0년 이후의 평균적인 세수증가 추세를 고려하고 불확실한 경기상황, 부진한 기업실적,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수입이 7.6%나 증가하는 것으로 잡은 것은 다소 낙관적으로 추계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준다. 단기적으로 성장률과 국세수입 간의 불일치가 커지면서 세수추계가 그 만큼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수년간과 같은 막대한 추계오차가 반복된다면 재정당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재정운용 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긴축재정 하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재정수지적자가 예상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총수입이 전년 대비 13.5조가 축소되었지만 총지출은 18조원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적자는 전년도의 2.6%에서 상당히 악화된 3.9%에 달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에 비해 0.6%p가 증가하여 51.0%까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1]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에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비율을 GDP의 3%로 제한한 것은 명목GDP가 4~5% 수준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적자비율을 3% 내로 유지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재정준칙에서 정한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두고는 실질적인 재정긴축을 위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의무지출 대비 재량지출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 하에서도 재량지출은 총지출의 증가율(2.8%)에 비해 높은 3.5%가 증가함으로써 총지출 대비 재량지출의 비중은 47.0%로 전년도의 46.7%에 비해 높아졌다는 점도 특이하다. 물론 내국세 수입이 제한됨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된 법정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감소한 것이 의무지출의 증가를 둔화시킴으로써 재량지출에 여유를 준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지출 재구조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재량지출 측면에서 지출증가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그것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을 벗어나는데 기여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표 2. '23-'27 중기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연평균증가율
재정지출(증가율)	638.7(5.1)	656.9(2.8)	684.4(4.2)	711.1(3.9)	769.9(3.6)	3.6
의무지출(비중)	340.3(53.3)	348.2(53.0)	373.3(54.5)	394.0(55.4)	413.5(56.1)	5.0
재량지출(비중)	298.4(46.7)	308.7(47.0)	311.1(45.5)	317.1(44.6)	323.4(43.9)	2.0

주 : '24년은 국회 확정 예산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 8.

1)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24년의 3.9%를 넘어선 해는 외환위기였던 '98년(4.6%)과 코로나19 펜데믹 하의 '20~'22년(4.4~5.8%)이 유일함.

기상황 하에서 재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 간에 타협을 이룬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들은 또 다시 미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찾아보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의무지출의 적극적인 통제이다. '20년과 '21년에는 국세수입의 호조 등으로 재정총량이 확충된 탓에 의무지출 비중을 50%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2] '23년에 최초로 50%를 초과하였으며, '24년부터는 매년 1%p 내외가 증가하여 '27년에는 56.1%에 도달하게 된다. 그 후에도 의무지출의 증가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더욱 문제이다. 이는 정부가 예산안을 통해 강조하는 일반재정사업의 재검토, 보조사업 정비, R&D예산 합리화 등 재량지출의 재구조화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지 않으며, 의무지출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개혁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전반적인 점검 및 정비와 함께 각종 공적연금제도와 지방교육교부금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부문의 낭비와 비효율을 고려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혁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있어서 필수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무지출은 정부와 재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개혁이 가능하지 않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학령아동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관련 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 또 현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재정당국은 '재정비전 2050'을 추진하면서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을 의욕적으로 시도하였지만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험도 있다. 그러므로 의무지출의 실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정준칙의 법제화 과정에서 기존의 재정수지 준칙에 더하여 재정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무지출의 증가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세입확충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근거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흔히 볼 수 있었지만, 2022년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치인 34.0%에 가까운 32.0%까지 높아졌다. 2002년의 국민부담률은 21.3%에 불과했으므로 20년 만에 10%p 넘게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적인 국가부담률은 2002년의 32.3%에서 1.7%p 증가하는데 그쳤다.[3] 국민부담률의 증가세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빨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세율인상 등의 증세는 현실적이지 않지만, 과세대상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세입기반이 자연스럽게 확충되는 것이지만, 우리 경제에 관한 국내외 전망에서 보듯이[4] 잠재성장률의 중장기적인 하락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대전제 하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국민부담률 수준과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최적 조합을 찾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2)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증가하다가 '19년에 49.4%까지 높아졌으며, '20년과 '21년에는 각각 46.0% 대로 낮아졌지만 '22년에는 49.9%로 다시 높아졌음.
3)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4) OECD, The Long Game: 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e Reform, 2021.

한편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재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와 재정의 정치화 경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에 경고음이 울렸지만 재정을 확장하여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잦아들지 않는다. 재정학 교과서에 따르면 재정정책은 정부가 재정지출과 조세를 통해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는 정책으로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가 핵심 목적이다. 즉 재정은 단기적인 경기변동과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생문제 해결, 서민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포장하여 재정자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선거에서 이기는 등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현금성 복지 확대, 각종 선심성 예산의 남발, 지방소멸대응예산 확대,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런 정치적 이익 추구가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와 타협한다면 재정 정치화의 고리가 연결되며, 정치권 스스로의 각성이나 유권자들의 자발적 견제를 통해 이런 현상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재정이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끝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대부분 사회·경제적 문제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싶다. 두 가지 상황은 재정 측면에서 수입의 증가세를 둔화 또는 정체시키는 반면 지출의 증가속도에 박차를 가한다. 재정적 애로는 부분적인 현상이며,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인구감소세를 반전시키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면 재정을 둘러싼 다양한 제약조건은 크게 완화될 것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이다.

2024 경제정책방향과 새로운 경제팀의 3대 과제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활성화, 감세기조 유지 의지가 확실하게 보인다. '민생'이라는 말은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다 보니 늘 모호한 측면이 있고, 각 정파마다 제 편한대로 끌어다 쓰는 다중 언어이긴 하다. 그럼에도 민생이라는 말을 정부도 민간에서도 자주 쓴다. 전통적 내지는 원론적 의미에서의 민생 경제 회복에 힘써보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다. 그렇게 역동적 경제를 위한 기반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할 만하다.

통상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은 세모에 발표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해가 바뀌어 새해 벽두(1월4일)에 발표됐다. '정부의 경제팀장'이 바뀌면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큰 역할을 양보 내지는 유보한 것이었다. 전임 팀과 후임 팀은 줄곧 함께 일을 해온 터여서 서로 이질적이라거나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육상 계주로 치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간 바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먼저 정부 발표로 본 갑진년 경제정책의 주목되는 특성 세 가지를 정리해본다.

첫째 원칙과 기본에 비교적 충실했다. 기본적으로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한 게 돋보였다.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적확한 방향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과 반도체 회복 덕분에 올 한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결국 태영건설 건으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투자심리도 상당히 얼어붙어 있다. 이런 상황에 여야 공히 건곤일척의 싸움인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재정지출 확대 압박이 계속 고조되지만 확장재정의 돈 풀기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원칙 없는 돈 풀기는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국가 채무만 늘릴 수 있다. 선거 때면 이런 원칙은 뒷전으로 밀리는데, 이를 확실히 했다.

둘째 규제 혁파 노력 의지도 분명했다. 규제를 풀어야 기업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수없이 강조돼왔다. 돈 들이지 않고 경제 살리기에 가장 나은 선택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유효한 방편이다. 하지만 규제도, 각 지출 예산도 정부 안팎에 '주인', 정확히는 '주인 행사자'가 있다. 이 때문에 규제개혁은 늘 용두사미에 그치고 미완으로 끝난다. 정부 안에서도 언제나 내가 쥐고 있는 규제는 빼고 남의 규제만 혁파하라고 한다. 늘 원론에서는 찬성하지만, 구체적 각론에 가면 결사적 반발 내지는 저항이 일어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몇 가지 주목할 규제혁파 다짐이 나왔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다. 규제 혁파는 많을수록 좋지만, 명시적으로 국민체감형 성과를 내면 단기적으로는 성공이다. 이런데서 투자가 일어나고 정부가 정한 성정의 목표, 일자리 확충, 투자 살리기 등이 한걸음씩 나아간다.

셋째 감세기조 유지다. 신규 감세가 더 돋보이겠지만 여소야대 국회와 줄어드는 세수(稅收)를 보면서 감세를 계속 밀어붙이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정석 대처법이라도 여론을 넘어서는 것은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더 힘들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과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이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12년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경기 부진 탓에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연말 일몰돼 버렸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산업계가 연장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번에 수용했다. R&D 투자세액공제율 올리기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대체로 무난하다. 명시적 감세가 아니어도 감세기조라면 충분히 대안이 된다. 감세에 대한 야권과 일부 언론의 쏟아지는 비판을 잘 극복해나가는 게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다.

새 경제팀이 스스로 내세운 올해 경제정책운용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본다. 무엇보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어도 정석의 대응법과 정공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요컨대 필요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성과를 내는 데는 지혜뿐 아니라 용기와 뚝심이 필요하다.

투자를 살리는 문제로 돌아가 보자. 설비투자는 2022년 0.9% 줄어든 데 이어 2023년에도 0.2% 뒷걸음질 치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2.2%를 달성하려면 설비투자가 3% 이상 늘어나야 한

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투자세액공제를 늘린 배경일 것이다. 세액공제 확대는 정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4월 총선에서 정부에 유리한 정치적 지형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여러 가지 정치적 시나리오에 대해 미리미리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올해 경제정책의 실탄 격인 예산집행의 효율 극대화도 당연히 중요하다. 2024년 SOC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전체적으로 지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쓰겠다는 대목이나 빈사상태의 공룡 한국전력을 보면서도 공공요금을 동결한 것을 보면 다분히 총선을 의식했다. 주요 선거가 있는 해엔 늘 봐온 일이다. 문제는 하반기에 가서 여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라도 대두되면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는 헛구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편성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마중물 효과를 단단히 낸다면 조기집행으로 기재부가 맞게 될 '잔펀치'는 일회성으로 흘러갈 것이다. 큰 틀에서의 일관성, 원칙의 유지가 관건이다.

둘째 어떻게 해서든 올해 기업이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규제혁파에서 실적을 보이든 투자를 옵소하든 해야 한다. 기재부 힘만으로 부족하다. 대통령실부터 총리실과 전 부처가 움직여야 한다. 반도체가 호전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어려운 쪽이 더 많다. 기업이 나라 안팎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에 망설이지 않도록 기재부가 더 뛰어야 한다. 뭔가 속도를 내야 지표, 실적에 반영된다. 야당은 전가의 보도처럼 '대기업 특혜'라고도 반대공세를 해댈 것이다. 그렇다고 주춤해하면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부총리쯤 되면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 때로는 '정치적' 행보도 보여야 한다.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판을 짜고 여론도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다. 정공법에 충실하고 정석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라면 때로는 파격적 결단도 나쁠 게 없다.

감세 기조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공세와 선동을 방불케 하는 비판도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 경제를 살려낸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혼자 다 할 수 없다. 학자 교수 연구가 등 전문가들 동원하고 국책기관의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비롯한 유관 국책연구기관의 역량과 기능도 극대화해야 한다. 신문 방송사도 찾아다니며 언론설명회를 더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법인세 감면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은 살아있는 교재요 교훈이다.

셋째 올해만 그럭저럭 넘기는 차원 이상의 중장기 성장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조기에 늙어가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저성장은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이면서 결과다. 노동 연금 교육 등 현 정부가 제시한 3대 개혁과제도 깃발은 높이 올랐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 출범 어느 듯 3년차에 접어들며 올해는 반환점에 접근한다. 과제로만 보면 지금 대한민국호가 넘어야할 과제는 첩첩산중이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십 년 균형발전 논리를 무색케 하는 서울과 비수도권의 격차, 대통령이 또 지적한 칸막이 행정 적폐,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는 양극화 아젠다 같은 문제 들이다. 이런 신(新)한국병을 묶어서 보면 과거 영국병 저리가라다.

이런 문제에도 최소한의 해결 로드맵이 필요하다. 아니면 최소한 이해와 납득의 공감대라도 구축해나가야 한다. 경제문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하지만 잘못되면 모두 경제에 큰 걸림돌들이다. 노사문제를 빼고 한국의 산업발전을 얘기할 수 없고, 연금개혁 없이는 한국의 재정문제를 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런 데서 올해는 하나씩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검증된 선순환 원리 작동의 엔진을 잘 돌리는 게 중요하다. 전임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4년 예산에서 긴축재정의 원칙을 지킨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전재정이 말로만의 구호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건전재정에 한발 접근했다. 그의 공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 노력을 새로운 경제팀은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

'희망의 새해'를 말하지만 그다지 밝은 한해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현 경제팀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인기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고위직들이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정면 돌파를 통한 문제해결은 한결 쉬워질 것이다.

정부의 올해 주요 감세정책

(단위: 조원, %, %p)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기본	연장 적용
대·중견기업	15	25
중소기업	25	35

※국가전략기술기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공제율	40	80

R&D투자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현행	상향 적용
대기업	25	35
중견기업	40	50
중소기업	50	60

※일반분야기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1억원 안팎

출처: 한국경제신문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기반한 재정성과정보 관리 활용 방안

박정수 부연구위원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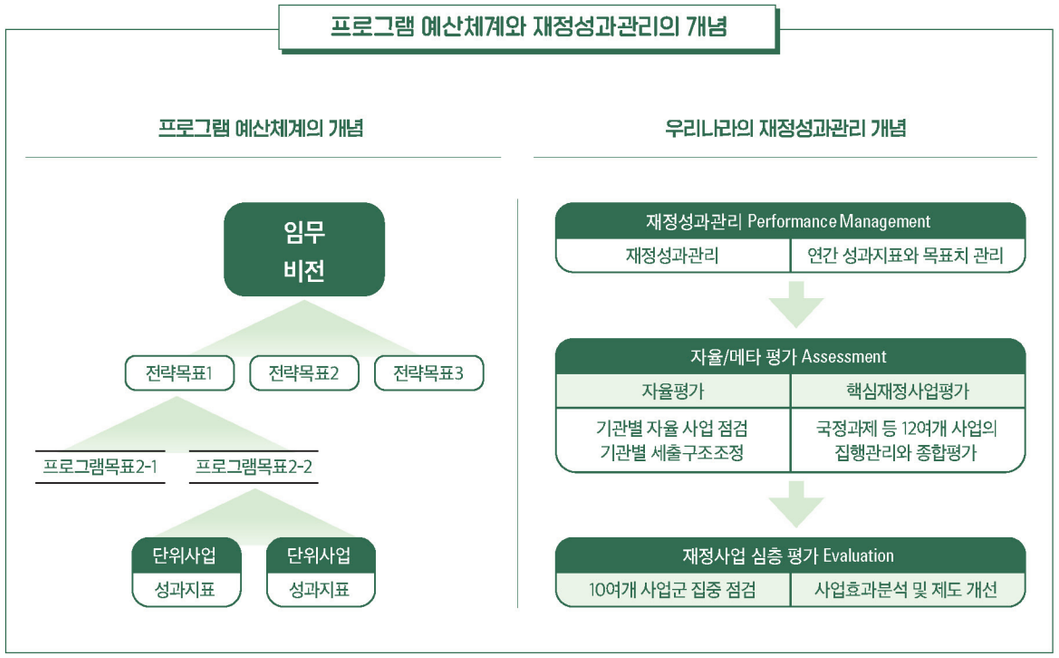
재정성과관리와 프로그램예산체계는 2000년대 중반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재정관리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란, 재정사업을 유사성을 근거로 묶어 올라가는 상향식 예산 편성과, 대·중·소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할해 나가는 하향식 예산 편성이 만나는 지점의 프로그램을 예산 운용의 중심으로 삼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정사업 성과관리란, 복수의 사업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 구조화하고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라는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이 평가정보를 재정정 운용과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재정성과관리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하고, 재정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양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양자는 재정정보의 관리라는 하나의 틀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따라 구분된 재정사업을 기준으로 재정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정보, 즉 재정성과정보를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따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이후 각종 재정과정에서 필요한 과거의 정보들을 적시에 꺼내어 열람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재정성과관리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라는 제도적 틀, 실무자와 업무처리 절차, 그리고 인적, 전산지원이 필수적이다.

그간 재정성과관리와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도입된 이후 상당한 시점이 경과되었고, 두 제도는 견고하게 정착되어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 실무적, 전산관리상의 한계로 인해 재정성과관리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저장된 정보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재정과정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재정과정의 모든 정보가 재정성과정보로 다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따라 하나의 전산시스템에 체계적으로 저장되지 못했다. 특히,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의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다부처 사업, 다부처 기금 사업으로 명명되어 별도의 평가체계를 가지고 관리중인 사업들의 정보는 더더욱 그렇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공식적 재정성과관리 체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평가를 광의의 재정사업 성과관리로 보고, 이들 정보를 공식 예산체계인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부합하여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성과관리

프로그램예산체계의 개념은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현행 체계는 2006년 정립되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목적은 품목과 부서 중심의 예산편성을 바꾸어, 예산, 기획, 집행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예산을 목적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입 뿐 아니라 산출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개혁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정보는 2007년 가동한 디브레인 시스템 상에서 관리되어오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외양과 이에 기반을 둔 재정관리는 현재 정착단계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성과관리의 개념



재정성과정보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 계획, 평가를 통한 산출 점검과 성과관리, 환류라는 체계 속에서 생산, 관리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현시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정성과관리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존재를 전제조건으로 설계되어 있다. 우리나라 재정에서, 재정성과정보라 함은 크게 두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성과관리 체계 상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단위사업 중심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국책 또는 국정과제 사업으로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또는 핵심 재정사업으로 생산되는 정보이다. 둘째는 「국가재정법」(2021년 개정)에 따라 관리되는 "중복이 발생가능한 사업성과평가"로, 6개의 재정사업 대상 평가이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포함하면 중복이 가능한 평가는 78개로 아래 표와 같다.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현황

		일반재정사업	연구개발사업	재난안전사업	균형발전사업	일자리사업	국고보조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근거법령		국가재정법	연구성과평가법	재난안전기본법	균특법	고용정책기본법	국고보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평가제도		재정 사업평가	연구개발 사업평가	재난안전 사업평가	균형발전 사업평가	일자리 사업평가	연장평가	중소기업지원 사업평가
지원시스템		디브레인플러스	NTIS	SIIMS	REDIS / NABIS	일모아	e나라 도움	SIMS
평가방식		심층평가 자율평가 상위평가	특정평가 자율평가 상위평가	자율평가 +상위평가	자율평가 +상위평가-	일괄평가	외부평가	외부평가
평가대상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역사업	세부사업
시스템지원	기능	보고서 취합	보고서 취합	평가 근거 자료 추출	보고서 취합	평가근거 자료추출	보고서 저장	평가근거 자료추출
	지표관리	○	○	x	x	x	x	x
	저장정보	부처별 보고서	사업별 보고서	x	부처별 보고서	x	사업별 보고서	x

그간 재정성과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되지 않는 원인은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관리가 어려운 다부처 재정사업 등에 기인하기도 한다. 다부처 재정사업은 연구개발, 일자리 등 전체 다부처 사업군 예산이 하나의 소관, 회계, 분야, 부문에 소속되지 않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가진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부사업보다도 낮은 단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며, 별도의 독립된 평가·사업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부처 사업의 성과정보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맞추어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재정사업 성과정보 관리를 위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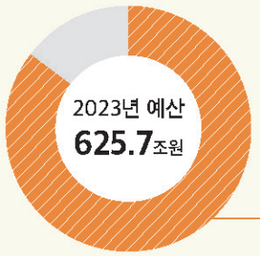
정부는 이와 같이 공식적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재정성과관리의 틀 밖에 있는 다부처 사업의 평가·관리 체계를 재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2021년「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다부처 평가를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이름 하에 조정하고 있다. 그 결실로, 2023년에는 상기 명시된 6개의 사업군에 대해 1사업 1평가 원칙, 평가지표 표준화 등 평가 표준화 및 간소화를 시행했다.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재정사업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의 신규 기능으로 구축하였다. 재정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만들어진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제도들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이제 재정사업 성과정보의 틀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각종 평가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재정의 전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아직까지 정보의 축적이 몇 개년 되지 않은 까닭에 재정사업 성과정보는 아직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틀에서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는 향후 시간이 지나고, 시스템이 개선되며 자료가 축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가 간소화되고 데이터가 표준화된 만큼, 재정성과관리와 프로그램예산체계가 도입된 후 그 어느때보다도 성과정보 전산화화 활용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시스템 개선과 정보 축적이 원활하게 되려면 정보처리 절차와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의 업무 위주의 데이터베이스, 처리절차 외에 각종 성과정보를 열람, 활용, 그리고 분석 및 공개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필요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항목도 관리자의 업무처리 부담을 고려해 최적화,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정관리자와 업무담당자가 저장된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분석 지원 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정보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박정수. (2020). 디브레인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방안. 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보고서 20-03.
____. (2022). 재정성과정보 분석 및 시스템 개선방안. 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보고서 22.
____. (2023).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기반한 재정성과정보 관리·활용 방안. 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보고서 23-03.

2023년 11월 기준 **재정동향**

총수입 **529.2조원** (누적 기준)



529.2조원
진도율 84.6%

총지출 **548.6조원** (누적 기준)

548.6조원
진도율 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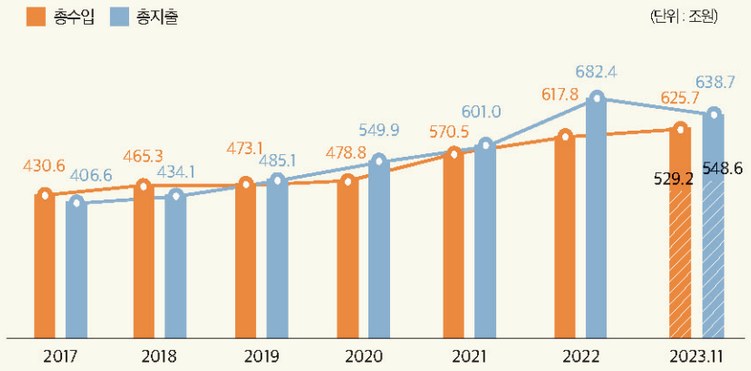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19.5조원 적자 (누적 기준)	64.9조원 적자 (누적 기준)	1,109.5조원 (누적 기준)

주: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4.1.

총수입 · 총지출

총수입
529.2조원
전년 동기 대비
-42.4조원

총지출
548.6조원
전년 동기 대비
-73.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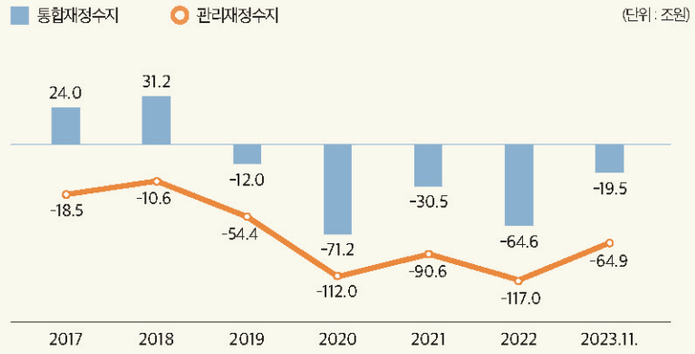


주: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19.5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31.4조원

관리재정수지
64.9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33.1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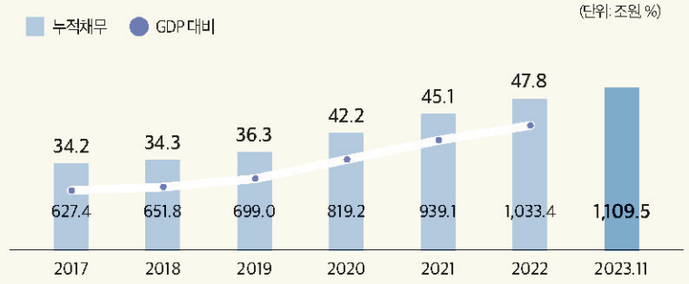
주: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5조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1,109.5조원
전월 대비
+4.0조원
전년 말 대비
+76.0조원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제공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2024년 경제정책방향

● **정부는 1월4일 대통령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

●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정책 기본틀 재정립**

• 전세계적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 대응
• 건전재정 기조 확립, 규제혁신, 부동산 세제·규제 정상화 등경제정책의 틀을 민간·시장 중심으
•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저변 확대

●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세계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겠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 예상**

● **2024년 경제전망은 세계교역 회복 등으로 성장세 확대(2.2%) 전망하였으며, 고용, 물가, 경상수지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

	2023년	2024년
• 경제성장률(%)	1.4	2.2
• 취업자증감(만명) - 고용률(%, 15세 이상)	32 62.6	23 62.8
• 소비자물가(%)	3.6	2.6
• 경상수지(억불) - 통관수출(%) - 통관수입(%)	310 △7.4 △12.1	500 8.5 4.0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그림 1.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월 해외재정동향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센터

미국

12.4. 배터리 및 친환경 자동차 제조 산업의 발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규정안 발표(재무부)[1]

•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외국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Requirement, FEOC) 규제*에 대한 세부 규정안 발표

※ 중국을 비롯 해외 우려국가의 정부소유·통제·관할·지시 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제조품 또는 배터리(또는 배터리 내 주요 광물) 등이 포함된 친환경 차량의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미국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해 '24년부터 친환경 차량 내 FEOC가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과 '25년부터는 친환경 차량에 FEOC가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한 주요 광물은 제외

• FEOC에서 배터리 구성품의 제조 또는 조립되거나, 주요 핵심 광물을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되며, 친환경 차량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배터리 구성품 요건) 배터리 부품 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의 보조금 지급

※ 23년: 50% 이상, '24-'25년: 60% 이상, '26년: 70% 이상, '27년: 80% 이상, '28년: 90% 이상, '29년: 100%

– (핵심 광물 요건) 배터리 내 포함된 핵심 광물 비율은 일정 기준*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서 추출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 내에서 재활용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의 보조금 지급

※ '23년: 40% 이상, '24년 50%, '25년: 60% 이상, '26년: 70% 이상, '27년: 80% 이상

12.7. 재무부는 원주민 거주지 개발 및 경제적 지원 확대 논의를 위한 원주민 CDFI 네트워크 정책 및 역량 구축 협의(Native CDFI Network Policy and Capacity Building Summit)[2]

• 긴급 자본 투자 프로그램(Emergency Capital Investment Program, 이하 ECIP)를 통해 원주민이 소유 또는 대주주인 예금 취급 기관에 2억 3,400만 달러 지원

– 재무부의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이하 CDFI 기금)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연방 자본을 원주민 지원 지역사회 개발 금융 기관에 투입

• '22년 4월 CDFI 기금은 원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신시장 세액 공제(New Markets Tax Credit, 이하 NMTC)* 원주민 이니셔티브 출범

※ 저소득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내 창업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 NMTC 이니셔티브 출범 이후 CDFI 기금은 원주민 거주지에 18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NMTC 활용에 관심을 보이는 여러 원주민 단체에 약 80시간의 직접 기술 지원 제공

• 최근 CDFI 기금은 NMTC 혜택을 받고자 하는 원주민 단체 지원을 위해 두 개의 새로운 보고서 및 가이드 발표

– 해당 자료는 원주민 사회 경제 개발에 대한 모범 사례와 성공 사례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원주민 단체의 NMTC 활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12.14. 소외지역사회 자본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논의(재무부)[3]

• 재무부 차관(Wally Adeyemo)은 애틀랜타에서 지역 개발 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 CDFIs) 및 소수자 소유 예탁 취급 기관(Minority Depository Institutions, 이하 MDIs)을 통한 농촌 및 지역사회 투자 확대 방안 논의

– 흑인 소유 은행이자 CDFI 및 MDI인 카버 주립은행(Carver State Bank) 주관 회의에 참석해 소외 지역사회 자본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재무부의 투자에 대해 논의

• 긴급자본 투자 프로그램(Emergency Capital Investment Program, 이하 ECIP)을 통해 175개의 연방 예금 취급 기관(CDFIs 또는 MDIs)에 약 85억 달러 이상 지원

– 지원 자금 중 14억 달러는 흑인 소유 및 흑인 대주주 예금 기관에 투자되었으며, 이를 통해 흑인 지역사회에 대한 대출이 향후 10년간 약 8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CDFI 기금을 통해 소외지역사회에 17억 3천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

• 12월 7일,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대출 촉진을 위해 CDFI 인증 신청서 개정 및 발표

– 이번 수정된 양식은 CDFI 기금 설립 이후 25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업데이트

– 개정된 신청서는 지역사회 금융 시장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CDFI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외 지역사회에 자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12.18.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24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년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블룸버그)[4]

• CBO의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CE) 물가지수* 전망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의 자체 전망치와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따른 전망치보다 낙관적으로 나타남

※ PCE 디플레이터라고도 하며, 국내 소비 물가의 전체 평균 상승도에 대한 미국 전역 지표로, 소비자에 '의해(by consumers)'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on behalf of consumers)' 지출되는 상품들이 대상으로 그 구성은 매달 변경되며 수치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발표

– CBO의 PCE 물가지수 전망치는 '24년 2.1%, '25년 2.2%이며, 연준의 PCE 전망치는 '24년 2.4%, '25년 2.1%, 경제학자들이 참여한 블룸버그 설문조사 전망치는 '24년 2.5%, '25년 2.2%로 나타남

– CBO의 반기 예측에 따르면, 12월 5일까지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PCE 물가지수(에너지 및 식품 비용을 제외)는 올해부터 2.4%로 완화되다 '25년까지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1)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939
2)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950
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979
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2-15/us-inflation-rate-seen-nearing-2-next-year-in-new-cbo-forecast?srnd=economics-tax-and-spend

• 소비자 지출 감소와 공급 여건 개선, 임대료 하락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24년에는 노동 시장 상황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
– '23년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24년 1.5%로 둔화된 후 '25년 2.2%로 반등 전망
– 최근 11월 급여 보고서(payroll report)에 따르면, 노동 시장 내 수요 둔화에 따라 실업률이 올해 기준 3.7%에서 '24년 4.4%로 상승할 전망이며 향후 2년 동안 이민으로 인한 노동력 증가 예상

12.21. '23년 10월 해외자본수지(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 TIC) 발표(재무부)[5]

• 10월 순유출 규모는 총 838억 달러로 집계
– 외국인 민간 부문은 684억 달러 순유출, 공공 부문은 154억 달러 순유출

• 장기 증권은 33억 달러 순유입, 달러표시 단기 부채, 은행 부문 달러표시 외화 부채는 각각 728억 달러, 143억 달러 순유출
– 장기증권은 외국인 거주자의 156억 달러 순매도하였으나, 미국인의 장기 해외증권 역시 189억 달러 순매수를 기록하며 전체 33억 달러 순유입 기록
– 달러 표시 단기 부채는 외국인의 국채 보유액이 255억 달러 감소하였고, 은행 부문 달러 표시 외화 부채 역시 143억 달러 감소

12.27. 미국의 혁신 촉진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청정수소 생산 세액 공제 지침' 발표(재무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6]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에 따라 제정된 '청정수소 생산 공제 지침' 발표
– 지침 내에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 청정수소 생산 세액 공제 포함

•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 청정수소 생산 세액 공제 설정
– 임금 규모 및 견습생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수소 생산의 수명주기 배출량에 따라 kg당 60센트에서 3달러까지 세액 공제 가능
– 세액 공제는 '33년 이전에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일부 시설의 경우 '40년대까지 계속 적용 가능

• 재무부는 납세자가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를 사용해 세액 공제 단계별 자격 평가 및 문서화 방안을 제공하며, 수소 생산업체가 구매하는 EAC에 반영 시 필요한 아래 세 가지 원칙 제시

* 친환경 에너지원 전력을 사용했음을 인증하는 인증서

– (증분성(Incrementality)) 수소 시설 가동 후 3년 이내 신규 건설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력 공급받을 경우 청정 전력 공급원으로 간주
– (지리성) 수소 생산설비와 동일한 지역으로부터 전력 공급되어야 함
– (시간적 상관성) 수소 생산과 공급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시간대 매칭 필요(즉,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전력이 전해조(Electrolyzer)*가 작동하는 시간 내에 청구된 발전량이어야만 한다는 의미)

* 전기 분해를 이용해 화합물을 분해하는 장치

5)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006
6)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010

영국

12.4. '23년 가을 재정 법안 발표(Autumn Financial Bill 2023) 내용을 통해 법인세 감면과 기업 R&D 세금 혜택 제도 간소화 발표(재무부)[7]

• '23년 가을 재정 법안에서 영국 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감면 내용 발표('24년 4월부터 시행 예정)
– 영국 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을 줄이고 간소화하여 연간 110억 파운드의 법인세 감면을 통해 영국 기업 지원
– 기업 투자 제도(Enterprise Investment Scheme)*와 벤처 신용 신탁 제도**운영을 '35년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 유치 지원

* 적격 기업(신설 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 조세 혜택을 제공
** 공인된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사회적 기업 투자 장려를 위해 투자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트럭, 드릴, 사무실 의자 등 가구 및 기계류에 대한 투자 세액을 25%까지 감면

• R&D 지출 공제 제도*와 중소기업 R&D 세금 감면 제도 통합 예정

*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혁신, R&D 가속화를 위한 세금 공제 제도

– 두 제도의 통합을 통해 R&D 세금 감면 제도를 단순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기대

12.7. '23년 11월 외환보유고(international reserves) 통계 발표(재무부)[8]

• 정부의 총 외환보유액은 1,870억 8,300만 달러(전월 대비 40억 달러 증가)
– 정부 순 외화보유액은 842억 2,700만 달러(전월 대비 22억 2,700만 달러 증가)
• 영란은행의 총 외화보유액은 234억 100만 달러(전월 대비 13억 3,500만 달러 감소)
– 영란은행의 순 외화보유액은 1,400만 달러(전월 대비 100만 달러 증가)

12.11. AI 에너지, 환경, 인프라 혁신에 초점을 맞춘 맨체스터상(Manchester Prize) 수여 계획 발표(과학혁신기술부, 재무부, 에너지 보안 및 넷제로부)[9]

• 과학혁신기술부가 주도하여 공공 이익을 위해 최첨단 AI 솔루션을 갖춘 혁신 팀에 매년 100만 파운드 수여 예정
– '23년 12월~'25년 3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영국 소재 기업, 비영리 단체, 대학 및 자선 단체로 '24년 2월 1일까지 출품작 접수 마감
– 심사 기준은 1) 혁신성 2) 영향력 3) 장기 실행 가능성 4) 프로토타입의 타당성 5) 안전성 및 윤리성 등
– 첫 두 해는 에너지, 환경, 인프라 전반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 자동차 충전 방법 최적화, 가계 에너지 소비 감축 솔루션, 제조 프로세스 자동화(소비자 비용 감축) 등 탈탄소화 계획 가속화 도구로써의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선발

• 올해 처음 출범하는 맨체스터상은 영국 AI 혁명을 최전선으로 끌어내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결선 진출자들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주요 이해관계자, 잠재적 투자자, 기술 채택자들과 교류하며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을 장려

12.14. '23년 10월 GDP는 전월보다 0.3% 하락하였으나, 4분기는 0.1% 상승 전망(파이낸셜타임즈)[10]

• 10월 GDP는 서비스 활동과 제조업 및 건설 산출액이 감소한 가운데, 물가 상승과 차입 비용 상승이 GDP 하락의 주 요인

7) https://www.gov.uk/government/news/autumn-finance-bill-published-to-cut-tax-and-back-business--2
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official-holdings-of-international-reserves-november-2023
9)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ze-opens-for-ai-energy-environment-and-infrastructure-innovations
10) https://www.ft.com/content/631e9c37-1be8-4340-8a5e-c8e304b7c0d3#16125432

– 10월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업 산출액은 전월 대비 0.2% 하락
– 상점, 음식점, 미용실 등 소비자 대면 서비스 산출액이 10월 전월 대비 0.1% 감소했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5% 낮은 수준을 유지
– 습한 날씨가 소매업, 주류업, 관광업,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
– 8월 제조업 산출액은 전월 대비 0.5% 감소하였고, 9월은 전월과 동일, 10월은 0.8% 감소
– 임금 인상률은 상여금 제외시 7.3%, 포함 시 7.2%로 여름 최고치인 8.5%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수준이어서 노동시장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15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며, 10월~12월 동안 0.1%의 경제성장률 상승을 전망
– 투자자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였고, 경제학자들은 10월 GDP 하락으로 통화정책위원회의 내년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중
– '24년까지 네 번의 금리 인하를 통해 '24년 말에는 4.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국채 수익률은 0.05%p 하락한 3.9%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는 중

•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영란은행은 가계와 기업이 높은 차입 비용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24년 산출액은 정체될 것이라고 분석
– 공공부문회계사협회(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CIPFA) 이사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차입 비용이 11월과 12월 경제활동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국 총리(Rishi Sunak)는 경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
– 재무부 장관(Jemery Hunt), 금리 인하를 통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동안 GDP 축소는 피할 수 없음을 밝히며, 가을 성명에서 발표된 사업세(법인세, 자본이익세 등) 대폭 인하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12.18. 영국 정부, 넷 제로 달성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적 주택 등의 난방시설 교체 지원 등 보조금 지원 계획 발표(에너지 안보 및 넷 제로부, 재무부)[11]

•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28년까지 60억 파운드 지출 계획 재확인
– 보일러 개선 계획은 가정 내 보일러를 저탄소 열 펌프 전환할 수 있도록 15억 파운드 할당
– 난방 보조금* 규모는 5,000파운드에서 7,500파운드로 인상하여 신청 건수가 57% 증가, 이후 15억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

* 가정용 난방 시스템을 가스 보일러에서 히트펌프로 교체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

– '25년부터 라디에이터 또는 단열재 교체에 4억 파운드 규모의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 보조금 지원
– 최대 60,000가구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및 난방 문제 주택의 단열 조치 지원을 위해 5억 파운드 할당
– 사회주택 탈탄소화 기금(Social Housing Decarbonisation Fund)은 14만 채의 사회적 주택*의 단열·개보수를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요금 절감 지원을 위해 12억 5,300만 파운드 할당

* 국가나 비영리 공공단체 등이 소유·관리하는 임대주택

– 녹색 열 네트워크 기금, 저렴한 저탄소 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4억 8,500만 파운드를 배정
– 열 네트워크 효율화 제도는 약 100개의 기존 열 네트워크 개선을 위해 4,500만 파운드를 할당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신뢰성 향상
– '28년까지 공공부문 탈탄소화 계획과 산업 에너지 효율성 및 탈탄소화를 통해 기업, 중공업, 학교, 병원 등에서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원
• '25년부터는 새 주택과 건물에 친환경 난방을 도입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 계획

12.21. 영국 총리(Rishi Sunak), 5대 우선순위 공약* 이행 관련 브리핑(파이낸셜타임즈)[12]

*①인플레이션 감축 ②경제 성장 ③부채 감축 ④국민건강서비스(NHS) 대기시간 감축 ⑤불법이민방지

• 총리는 인플레이션이 1월 이후 절반으로 감소되어 첫 번째 공약은 달성되었으나, 다른 공약은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각에 전달
– 부채는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고 발표
– 이민자의 영국해협 횡단 횟수가 30% 감소하였으며,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기 위해 2억 9,000만 파운드 지출 계획
– 병원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공약은 대기자 증가(1월 720만 명 → 10월 770만 명)로 이행에 어려움
• 예산책임청(OBR) 11월 전망 당시, 공공부문 순부채가 '26/'27회계연도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공공부문 순부채는 '22/'23 GDP 대비 84.9%, '26/'27에는 93.2%로 증가하고, '28/'29에는 92.8%로 소폭 하락 전망

12.27. 네 가지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투자 목표 공유(재무부)[13]

*①영국 지역사회 개선 기금(The UK Community Renewal Fund) ②생활개선기금(Levelling Up Fund) ③지역사회 소유권 기금(Community Ownership Fund) ④영국 공유 번영 기금(The UK Shared Prosperity Fund)

• 영국 전역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개선 기금의 목표
– 기술, 지역사회의 사업 등에 투자하여 취업을 지원
• 생활개선기금(Levelling Up Fund)을 통해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인프라에 48억 파운드 투자
– 도심과 번화가 개선, 지역 교통 개선, 문화유산에 투자 예정

• 지역 소유 자산에 투자하는 지역사회 소유권 기금에 1억 5,000만 파운드 지원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전역의 주요 시설, 지역사회 자산, 편의시설을 지원

• 영국 공유경제 기금, 기술 교육 지원, 급여·고용·생산성 향상 지원 등 영국 우선순위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25년 3월까지 26억 파운드 투자 예정

EU

12.8. 코로나19 이후 일시 중단되었던 EU 재정준칙 개편에 대해, 회원국 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독일-프랑스 간 세부 규정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임(파이낸셜타임스)[14]

• EU 재무장관들은 재정준칙 개편 관련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
–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으로 불리는 EU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와 부채 비율이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대해 부채 감축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의무 불이행 시 EU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원칙

•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각국의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준칙 이행이 어렵게 되자, EU는 올해 말까지 재정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중단

11) https://www.gov.uk/government/news/families-business-and-industry-to-get-energy-efficiency-suppor
12) https://www.ft.com/content/db9ad27a-3e0f-4223-9c56-644a7334db5d
13)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new-levelling-up-and-community-investments
14) https://www.ft.com/content/c42bd219-99a4-4b8e-b882-ea181c78bebb

– 내년부터 재시행되는 재정준칙은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EU 집행위원회는 즉각적인 제재 대신 부채 감축 조정 기간을 4~7년 부여하는 개편안을 발의

• 그러나 세부 규정 논의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 간 입장 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독일은 회원국이 과도한 적자를 줄이도록 부채 제동장치(debt-brake)를 개편안에 포함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재정준칙 상 부채 한도를 초과한 국가라도 투자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EU는 성탄절 연휴인 12월 25일 이전 다시 회의를 열어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

12.18. EU,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지원 예산안 합의 실패(파이낸셜타임스)[15]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Charles Michel)은 EU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포함한 EU 다년도 지출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증액에서 헝가리 정상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언급

•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 지원안이 헝가리의 재정적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
– 헝가리 총리는 올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유일한 EU 지도자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에 반대 입장 표명

•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헝가리 설득에 주력하되, 만장일치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차기 정상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
–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헝가리 동의 없이 EU 예산을 거치지 않고 각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와 양자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고심중이라 언급

12.21. 유로 지역 연간 인플레이션 2.4%로 하락(Eurostat)[16]

• EU통계국(Eurostat)은 11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이하 CPI)가2.4%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10월 2.9% 대비 약 0.6%p 하락
– 지난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0.1%) 대비 완화된 수준이며, '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

• 국가별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한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였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한 국가는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순
– (낮은 인플레이션 국가) 벨기에(-0.8%), 덴마크(0.3%), 이탈리아(0.6%)
– (높은 인플레이션 국가) 체코(8.0%), 헝가리(7.7%), 슬로바키아(6.9%), 루마니아(6.9%)

• 품목별 인플레이션 기여율은 서비스 부문이 가장 높았으며, 식료품, 주류 및 담배, 비에너지 산업재 순 기록
– 유로지역 인플레이션 기여율은 서비스 부문(1.69%p), 식료품, 주류 및 담배(1.37%p), 비에너지 산업재(0.75%p) 순이었으며, 에너지 부문(-1.41%p)은 물가 하락에 기여

12.27. 독일-프랑스 간 EU 재정준칙(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대한 타협안을 마련함에 따라 재정준칙 초안 확정(파이낸셜타임스)[17]

• 수 개월간의 협상 끝에 독일과 프랑스 재무장관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27개 회원국이 재정준칙 초안을 확정
–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실제 적용 시점은 '25년이 될 전망

• 타협안의 핵심 기조는 부채비율과 재정적자 관련 목표치는 유지하면서 각국에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매년 5%p에 달했던 초과 부채 감축 비율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
– 보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주장해 온 독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회원국들의 독립성을 허용하되, 엄격한 지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설정
–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국가는 매년 1%p씩, 60~90%인 국가는 0.5%p씩 낮춰야하며, 재정적자 수준과 관련해서도 GDP 대비 비율이 1.5~3%인 국가는 매년 1%p씩 낮춰야 하며, 7년의 부채 감축 기간을 보장받은 경우 감축 규모는 0.25%p로 축소

• 네덜란드 재무장관(Sigrid Kaag)은 재정준칙 개편안이 국가별로 서로 다른 사정을 고려했으며, 투자 확대 여지를 남겨 개혁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부채 감축이 가능해질 것이라 설명

독일

12.14. '23년 10월 연방정부 수입 3,034억 유로, 지출 3,716억 유로, 수지는 682억 유로 적자[18]

• '23년 10월 연방정부 수입은 총 3,034억 유로로 전년 대비 7.1%(약 200억 유로) 증가
– 세수입은 2,811억 유로로 '22년 10월보다 6.6%(175억 유로) 증가, 기타소득(other income)은 13.0%(26억 유로) 증가

• '23년 10월 연방정부 지출은 총 3,716억 유로로 전년 대비 3.8%(약 148억 유로) 감소
– 투자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6.1%(74억 유로) 증가한 반면, 소비지출은 6.2%(221억 유로) 감소
– 금리 인상으로 이자 지출은 약 205억 유로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2%(451억 유로) 감소

• '23년 10월 연방정부 재정수지는 약 682억 유로 적자

국제통화기금

12.8. 벨기에의 '23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19]

• 벨기에는 지난 3년 동안 경제, 금융 부문에서 회복력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 성장이 둔화되고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24년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
– 벨기에 당국의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에너지 위기 등 일련의 충격에서 경제와 금융 부문이 적절하게 대응
– 그러나 대부분의 유로 지역 국가들과 비슷하게 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며, 공공부채, 재정적자 악화와 인구 고령화, 기후 전환에 따른 공공재정 압박, 낮은 생산성, 노동 참여율 등 성장 동력 약화
– 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24년 경제성장 둔화는 지속될 것이나 이후 임금과 사회적 혜택(social benefit)의 연동과 에너지 가격 하락, 민간 소비 정상화에 따라 평균 잠재성장률로 회복 전망
– 인플레이션은 '23년에 2.5%까지 하락한 후 에너지 가격 지원 정책 효과의 축소로 '24년에 4.4%로 회복할 것이며,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GDP 대비 약 5.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15) https://www.ft.com/content/deb40df7-7832-4fee-a822-655ab0288c05
16)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19122023-ap
17) https://www.ft.com/content/62b70a23-ed5b-4cb2-b760-76aa9cc31180
1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Monthly_Report/ Key_Figures/2023/2023-11-federal-budget.html#
19)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2/07/Belgium-2023-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the-542049

• IMF는 지역적·경제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 심화, 정치적 위험에 주목하면서 당국에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 등을 권고
– 디스인플레이션과 재정 여력 확충, 재분배와 사회 연대(solidarity)에 중점을 둔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재정 건전화의 중요성 강조
– 감독 강화, 위기 관리 및 거시건전성 프레임워크와 같은 대응책 마련,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금융 부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권고

* 금융 부문 전체가 부실화될 위험을 의미하며, 시스템 리스크는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음

– 성장 회복과 재정 건전화의 영향 완화, 낮은 생산성과 노동 참여율 등 중기적 과제 해결을 위해 노동 및 생산시장에서의 구조 개혁과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정책 강조

12.14. 우크라이나의 '23년 연례협의 및 확대금융제도(Extended Fund Facility, EFF)에 대한 두 번째 검토 결과 발표[20]

• 우크라이나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 전쟁으로 인한 인명 손실, 생활 수준 악화, 인프라 손상 등에도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 '23년 경제성장률은 4.5%로 상향 조정, 전쟁과 잠재적 정책 실패, 외부 자금 조달의 지연 또는 부족 등의 리스크로 '24년 경제성장률은 3~4%로 전망
• 생활 수준 회복과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한 당국의 노력과 함께 중기적인 대외 회복력과 전후 복구 및 재건 준비를 위해 유럽연합 가입 촉진과 지속적인 외부 지원 필요성 증대
– '23년 3월 IMF는 우크라이나에 116억 SDR(약 156억 달러, 쿼터의 약 577%) 규모의 48개월 EFF를 승인하였으며, 이는 1,22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 일부에 해당
– 이번 검토 결과, 어려운 환경에도 EFF는 당국의 경제 부양책을 지원하며 10월까지 대부분의 정량적 성과 기준과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며 9억 달러(6억 6,390만 SDR)의 즉시 인출 승인

• IMF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고 재정 및 부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견고한 중기재정 방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단기적으로 우선 지출 항목을 위한 재원 확보와 강력한 세수 기반을 유지해야 하며, 예산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공공 투자 관리 강화와 중기 예산 프레임워크와 지출 계획 개선 제안
–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한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자금 조달 전략 수립과 '24년 중반까지 외부 부채 생환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세스 마련 권고

12.18. 필리핀의 '23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21]

• 필리핀은 '22년 팬데믹으로부터 강력한 회복세를 보인 후 '23년 상반기에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3년 하반기부터 다시 반등세를 보이며 '24년에도 이어질 전망
– 팬데믹 이후 외부 충격과 재정적자, 수요 정상화로 인해 GDP 대비 경제성장률은 '22년 7.6%에서 '23년 2분기 4.3%로 하락한 이후, 공공 투자와 대외 수출 개선으로 '24년 6.0%까지 상승할 전망
– 인플레이션은 '23년 초 정점을 찍은 후 점점 하락하였으나 새로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10월 정책금리 25bp 추가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4년 초에 점진적으로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국내외에서의 高 인플레이션 추세 지속과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지정학적인 대외 여건 등을 비롯하여 향후 성장 전망에는 하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

• IMF는 긴축 통화정책 유지, 부채 지속가능성 관리,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 및 금융 부문의 복원력 강화, 투자 회복 지원, 국내 생산성과 생활 수준 향상 등을 권고
– 안정적인 물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원자재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2차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권고
– 부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 재정계획에 따른 재정 건전화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지출 효율성 개선, 우발 부채 감축 등을 제안
– 인프라와 교육 강화, 외국인 투자 촉진, 거버넌스 강화, 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기술, 사회 안전망 강화와 동시에 기후변화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

12.21. 인도의 '23년 연례협의 결과 발표[22]

• 인도는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 세분화로 인한 글로벌 성장 둔화 등 어려움 직면
– 2022/23 회계연도의 실질 GDP 성장률은 7.2%를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에 힘입어 2023/24 회계연도와 2024/25 회계연도에는 6.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은 평균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로 최근 식품 가격의 충격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점진적으로 목표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급격한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한 무역 및 금융 여건 악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심화, 국내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수출 제한 등을 하방 리스크로, 소비자 수요와 민간 투자 개선, 외국인 투자 여건 완화, 노동 시장 개혁 등을 상방 리스크로 언급

• IMF는 부채의 지속가능성 관리와 동시에 재정 여력 확보, 물가 안정, 금융 안정성 유지, 구조 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가속화 등을 위한 정책 권고
– 포용적 성장 추구와 동시에 중기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공공부채 증가에 대비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마련 필요
–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데이터에 의존한 통화정책 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시장에 통화정책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강조
– 교육, 보건, 토지, 농업, 노동 시장 분야의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성장 촉진과 함께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즈니스 환경 개선, 최근 도입한 무역 규제 철폐 등 권고

12.27. 국가 간 결제서비스(cross-border payment)*에 대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권고사항 발표[23]

*해외송금, 국가 간 무역대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지급인이 타국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의미

2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2/11/Ukraine-2023-Article-IV-Consultation-Second-Review-Under-the-Extended-Arrangement-Under-the-542297
2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2/14/Philippines-2023-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the-542518
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3/12/18/India-2023-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Statement-by-the-542605
23) https://www.imf.org/en/Publications/Policy-Papers/Issues/2023/12/22/IMF-and-World-Bank-Approach-to-Cross-Border-Payments-Technical-Assistance-542886

• 해외송금을 비롯한 국가 간 결제서비스는 신흥개발도상국의 빈곤율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최근 G20은 국가 간 결제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
– 더 빠른 속도의 저렴하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국가 간 결제서비스는 전 세계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경제 성장, 국제 무역, 글로벌 개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등을 지원

* 개인이나 사업체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지불가능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

– 국가 간 결제서비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①기존 결제서비스 인프라 개선, ②규제감독 및 감시체계의 조화, ③지급결제 정보의 표준화 추진을 중점 추진 분야로 한 11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며, '27년 말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

• 현재 거래 속도, 비용, 접근 수준, 투명성은 국가 간 차이가 크며, IMF와 세계은행은 금융안정위원회의 로드맵 달성이 어려운 국가들을 지원
– 연례협의와 IMF-세계은행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AP) 결과를 고려하여 분석, 정책 및 기술 자문, 워크숍,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각국의 국가 간 결제서비스 수준 개선과 자금 조달, 제도 개혁, 인프라 강화 등의 요구사항 해결
– IMF는 결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운영시간 연장 및 조정, 결제서비스 간의 호환성,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관련 규제 적용, ISO 20022 표준 준수 등 기술지원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 선발 및 추진

세계은행

12.4. 42개국의 국가 기후변화 및 개발 보고서(Country Climate and Development Reports, CCDRs)에 대한 두 번째 요약보고서 발표[24]

• 국가 기후변화 및 개발 보고서(CCDR)는 기후변화와 개발을 통합하는 핵심 진단 보고서로, 탄소 배출량 감축과 개발 목표 동시 달성을 위한 우선적인 조치 제안
– 데이터와 연구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기회, 비용과 과제를 파악하며, 저탄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제안
– CCDR은 공개 문서로 정부, 시민, 민간 부문 및 개발 협력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 및 기후 의제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22년 발표한 24개국 대상 20개의 CCDR과 이후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추가된 18개의 CCDR을 기반으로 국가별 우선순위와 글로벌 이니셔티브 제시
– 개발과 회복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개발은 회복력에 기여하고 회복력은 위기로부터 개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 개발과 회복력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
–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개발, 복원력 간의 시너지 효과로 저탄소 개발은 더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적, 기술적 기반과 지원이 필요
– 민간 부문은 회복력 있는 저탄소 개발을 위한 투자 수요(개발도상국의 경우 연간 GDP의 0.4~10% 증가) 충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혁신, 신속한 기술 채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공
– 산림 손실 문제 해결과 탄소 격리(carbon sequestration)* 촉진, 자연과의 상생이 필수적이며, 신속한 전환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선, 지출 효율성 향상, 정치·경제적 장벽에 대한 적절한 고려 필요

* 전력 생산이나 각종 산업 활동을 통해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모아 탄산염 등 적당한 담체나 지하의 특정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

경제개발협력기구

12.4. 「'23년 11월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23)」 발표[25]

• 세계 경제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전망의 침체라는 과제를 직면
– '23년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증가하였으나, 금융 상황 악화, 무역 성장 둔화, 기업신뢰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현재는 경기둔화 추세로 전환

•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기 둔화는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가 간 경제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
– 단기적 전망에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원자재 시장 및 교역 중단 가능성,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가계 저축 과다 등에 대한 다양한 위험이 포함

• 주요 정책 우선순위로 인플레이션 목표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보장, 재정 압박 해결책, 세계 무역 활성화,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전망 개선 등을 제언

12.11. 「'23년 연금 시장 포커스(Pension Market in Focus 2023)」 발행[26]

• '22년 금리 상승과 주식 가치 하락으로 광범위한 투자 손실 발생
– 은퇴 대비 포트폴리오의 두 가지 주요 상품인 채권과 주식 가격이 동시 하락, 명목상 투자 손실 범위가 큰 상황
–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

• 고용률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연금 상품에 참여하는 인구 및 기여금 증가
– '22년 고용률 개선으로 연금 계획 상품에 가입한 근로 연령 인구 비율 증가
– 명목임금 상승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목 기여금이 전반적 상승, 동시에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일부 은퇴자의 저축 능력 감소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투자 손실로 은퇴 적립 자산 가치가 하락, 일부 비 OECD 국가는 기여금 잉여로 손실 상쇄
– 많은 OECD 국가에서는 투자 손실로 은퇴를 위해 적립된 자산 가치가 하락
– 일부 비 OECD 국가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비하여 잉여 기여금이 투자 손실을 상쇄, 이는 주로 보험금 지급 단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최근 보험금 지급이 시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 이자율 상승으로 일부 국가의 자산 평가액이 감소, 한편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 지속가능성은 개선된 상황
– 이자율 상승은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의 부채 계산에 포함되어 있는 할인율의 상승으로 현 부채 가치 감소
– 일부 국가는 부채 가치가 자산 가치보다 하락하여 지속가능성 개선
– 고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부채를 평가하는 국가에서는 부채 대비 자산 비율 악화

24)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entities/publication/c9d962c9-5796-48c4-afc7-9feac8216ab8
25)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outlook/volume-2023/issue-2_7a5f73ce-en
26) https://www.oecd-ilibrary.org/finance-and-investment/pension-markets-in-focus-2023_28970baf-en

분배에 대하여

3

기본소득의 지급 vs 보장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전)조세재정연구원장, dsoak@naver.com

많은 학자들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한다.[1] 모든 개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은 정치철학자와 경제학자들의 오랜 신념이다. 그 수준에 대해서는 논자들 사이에 다양한 이견이 -최저생계인가 기본생활인가- 존재하지만, 그것은 주관적 신념의 충돌이 아니라 사회적 역량의 평가에서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 국부의 손상 없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정책적 역량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근래에 와서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서 정부의 재난성 현금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논자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의 집행 방법에 대해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일부 논자들은 보편적인 현금지급을 주장하고, 또 다른 논자들은 현금지급보다 소득보장(guaranteed income)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으로 불리는 입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매월 월급처럼 현금 형태의 지급을 주장한다. 반면 '음의 소득세(NIT, Negative Income Tax)'를 지지하는 입장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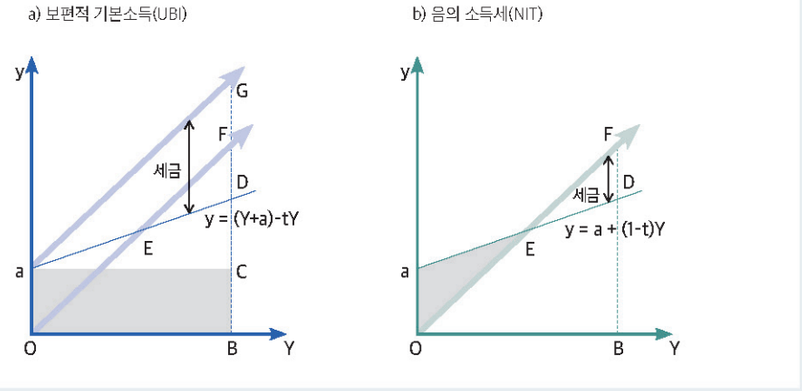
보편적 기본소득(UBI)과 음의 소득세(NIT)의 동등성

'보편적 기본소득(UBI)'과 '음의 소득세(NIT)'는 결과적으로 동등하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림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림]의 a)는 UBI를 b)는 NIT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가로축 Y는 시장소득을 세로축 y는 가처분소득을 나타내고, 원점에서 45도의 직선 OF는 Y = y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실선은 각각의 제도에서 가처분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1)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로는 James Meade, Jan Tinbergen, James Tobin, Gunnar Myrdal, Friedrich Hayek, Milton Friedman, Herbert Simon 등이 있다. Widerquist, Karl, Jose A. Noguera, Yannick Vanderborght, and Jurgen De Wispelaere(2013), eds., *Basic Icome: Anthology of Contemporary Research,* pp. xiv~xxi 참조.

그림 b)의 NIT에서는 가처분소득이 정부로부터의 이전금과 납세후 소득의 합으로 주어지기에 y = a + (1-t)Y (a는 이전금, t는 소득세율)의 관계가 성립한다. 개인이 수령하는 이전금과 납부하는 소득세의 차액인 a - tY의 값은 시장소득의 수준에 따라 양의 값이 되기도 하고 음의 값이 되기도 한다. 개인들의 시장소득이 점 E(Y=a/t)에 미달할 때에는 이전금을 수령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작아지는 이전금의 규모는 회색의 삼각형 OEa 인데, 정부는 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선 EF와 직선 ED의 차액을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2] 이전금의 총지급액과 소득세의 총수입액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FD가 a가 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이 성립하는 점 B는 Y=2a/t 가 되어야 한다.[3]

[그림] 보편적 기본소득(UBI)과 음의 소득세(NIT)



UBI를 나타내는 그림 a)에서는, 정부가 기본소득(=a)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세금 납부 이전에 Y+a 의 소득을 누린다(Y+a는 직선 aG로서 OF를 a만큼 상방이동). 가처분소득은 Y+a에서 소득세 tY를 공제한 금액인데, 이는 NIT 관계식과 일치한다. 그리고 정부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총금액은 회색의 사각형 OBCa로 표현되는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해야 한다. 소득세 수입 aDG가 OBCa와 일치하려면 GD가 2a가 되어야 하는데, Y=2a/t 인 점 B에서 이 조건이 성립한다.[4]

UBI와 NIT는 [그림]과 같이 동등한 결과를 보장한다. 다만 총소득(=½ × 2a/t × 2a/t) 대비 조세부담률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는 t이고 후자는 t/4 로서 4배의 차이가 난다.[5] 결국 UBI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그 재원을 많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이고, NIT는 이전금과 소득세를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이전 또는 징수하는 방법이다.

2) 소득자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기에, OB는 소득수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인원수도 나타낸다.
3) 점 B에서는 Y-y=a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Y=2a/t 가 된다.
4) (Y+a) – y = 2a 의 조건에 y=a+(1–t)Y 의 관계식을 대입하면 Y=2a/t 가 얻어진다.
5) 그림 a)의 세금 규모는 $2a^2/t$ 이고 그림 b)의 세금 규모는 $a^2/2t$ 이다.

스티그마, 재분배의 역설, 그리고 빈곤의 함정

UBI와 NIT는 모두 기존의 사회부조 정책에 대해 세 가지 측면의 비판을 제기한다.[6] 첫째, 전통적인 사회부조에서는 재산소득조사(means-test)가 실시되는데, 이는 수혜자들에게 스티그마(stigma)를 초래한다. 자신의 빈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재산소득조사 때문에 수혜자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수치심을 느낀다. 재산소득조사를 집행하는 공무원도 형사처럼 심문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로 수혜자들을 대한다. 이 모두는 인본주의적 사회부조에 대한 반(反)인도주의적 접근이다.

재산소득조사의 또 다른 문제는 개인들이 잔꾀를 부리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부정직한 사람들은 자격조건을 위장하며 복지급여를 타내려 하고, 정직한 빈곤자들은 자존감의 상실을 겪으며 스스로 복지급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순진함에 상실감을 느낄 것이다. 이는 복잡한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회의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사회부조가 빈곤퇴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급여의 수혜자는 반드시 최하위 소득계층에 집중되지 않는다. 뷰캐넌(James M. Buchanan)의 중위투표자 이론(median voter theorem)에 의하면 과반수제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안이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만약 복지정책에 이 이론을 적용하면 "(복지급여의) 이전지출은 중산층 집단에 혜택을 더 많이 줄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부자와 빈자는 착취를 당한다."[7] 이러한 현상은 '재분배의 역설(parodox of redistribution)'로도 불리는데, 저소득층에 집중하여 복지혜택을 주는 국가일수록 저소득층에 더 적은 금액이 재분배된다는 현상이다. 즉 복지혜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아줄수록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출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저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산층에게도 복지혜택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8]

중위투표자 이론과 '재분배의 역설'은 복지정책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중위투표자 이론은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정책들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실질적으로 채택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분배의 역설은 빈곤퇴치를 위해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정치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기존의 사회부조 급여가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OECD(2017)에서도 확인된다.[9] 사회보험을 제외한 근로연령대(18-65세)의 인구들이 수령하는 현금급여가 빈곤층에 집중되지 않고 국가에 따라서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부조 급여를 받는 것이 근로를 하는 것보다 수입과 여가를 더 많이 누리게한다는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다. 물론 불성실한 빈곤자들은 복지급여에 안주하며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비판은, 사회부조에서는 빈곤층에 생계급여로 불리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지만 그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벌기 시작하면 생계급여를 중지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빈곤의 함정, 또는 유인의 함정, 바근로의 함정이 존재할 것이다.[10]

보편적 기본소득(UBI) vs. 음의 소득세(NIT)

UBI와 NIT는 모두 기존 사회부조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 측면인 '스티그마'를 해결하고자 UBI는 재산소득조사를 아예 폐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인식한다. NIT 역시 재산소득조사의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 절차 내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한다.[11] 즉 UBI는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에 재산소득조사를 없앴지만 그 지급을 빈곤층에 집중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 NIT는 종합소득세 부과라는 보편적 절차 내에서 재산소득조사를 하는 것이기에 스티그마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12]

두 번째 측면인 '재분배의 역설'에 대해서는 NIT가 훨씬 더 심각하게 비판한다. UBI는 그 성격상 본질적으로 '재분배의 역설'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NIT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각종 혜택이 빈곤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NIT는 종합소득세 부과 절차 내에서 이전금과 소득세가 동시에 결정되기에 기본소득 증가와 조세의 증가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 만약 납세자에 대한 비용이 즉각 드러난다면 그 혜택만을 강조하는 정치적 선동은 민주주의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NIT의 대표적 주창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이 점에 착안하였다.

> "왜 현재와 같은 잡동사니 복지프로그램들이 채택되었는가? 이들을 쟁취하려고 강력하게 투쟁하는 특수이익 집단들이 있었고 또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투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정책들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주장에, 보편적인 이익의 증진을 원하는 비(非)편파적인 사람들이 설득 당했기 때문이다. 많은 정책들의 비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고, 또 정책재원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13]

6) Atkinson, Anthony B.(1996), "The Case for a Participation Income," *The Political Quarterly,* Vol. 67(1), 1996, pp. 67~70; Friedman, Milton (1968), "The Case for a Negative Income Tax: A View from the Right", in Widerquist, et. al.(2013), *Basic Income,* pp.11~16 참조.
7) Buchanan, James M. and Marilyn R. Flowers(1987), *The Public Finances: An Introductory Textbook,* 6th edition, p. 47 참조.
8) Korpi, W. and J. Palme(1998),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Welfare State Institutions,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October 1998, pp.661~687 참조. 2010년 이후 한국에서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청년배당 등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원호 · 이상준 · 강남훈(2016),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기본연구 2016-2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49 참조.
9) OECD(2017),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Can it add up?" Policy Brief on the Future of Work, May 2017 참조.
10) 이 경우 이전금은 그림 b)에서 일정한 소득수준까지 수평선으로 나타나고 그 이상에서는 0이 된다. 이에 대한 소득-여가 무차별곡선의 분석은 이준구, 조명환(2021), 「재정학」, 제6판, p.270 참조.
11) UBI는 기본소득을 지급한 다음에 증세를 추진하는 순차적 과정이지만, NIT는 이전금 지급과 증세가 종합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집행된다.
12) 종합소득세가 소득의 전부를 포착하는가, 명시적인 소득을 제공하지 않는 재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존재할 것이다.
13) Friedman(1968), in Widerquist et. al.(2013), pp.14~15 참조.

세 번째로 지적되는 '빈곤의 함정'에 대해서도 UBI 논자들과 달리 NIT 논자들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UBI 논자들은 기본소득의 지급을 우선하면서 기존 복지사업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훗날의 일로 연기한다. 반면 NIT 논자들은 NIT로부터 기존 복지급여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밀턴 프리드먼에 의하면 복지사업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목적과 사실상 무관한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보호, 선별적 산업진흥책 등을 반대하고 있다. 복지사업들을 구조조정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두 가지 점은 분명하다. 첫째, 빈곤의 완화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방향을 맞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하필 농부라면, 농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정책은 사람들을 그저 사람들로 보고 돕는 것이어야지, 그 사람들이 특정한 직업집단, 연령집단, 임금률 집단, 노동조직이나 업계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농업프로그램, 일반노령연금,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우대입법, 관세, 각종 기능과 전문직의 면허제도 등 곳곳에 널려 있는 결함이다. 둘째, 시장을 통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시장기능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는 가격지지, 최저임금법, 관세 등이 갖는 결함이다."[14]

14) Friedman, Milton(1962), "Negative Income Tax: The Original Idea," in Widerquist et. al.(2013), p.399 참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해답은 복지사업 집행의 정책적 역량에서 찾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재산소득조사를 집행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스티그마를 포함하여- 이를 전면 폐지하는 UBI보다 NIT가 우월할 것이다. 더구나 일자리가 제공하는 목적의식, 소속감, 성취감, 존엄성, 자아계발 등이 중요하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아비지트 배너지(Abhijit Banerjee)와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의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부조에서) 정확하게 수혜 대상을 설정하고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개도국에서 특히나 더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이 농촌이나 영세사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상자 식별이 매우 어려워서다. … 이 모든 문제를 볼 때, 개도국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충분히 진지한 고려 대상이 될 만하다. … (그러나)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통해 얻었던 자존감을 상실한 것이 부유한 나라가 처한 위기의 진정한 속성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여기에 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15]

한국은 이미 2009년에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며 NIT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16] 그런데 UBI 논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며 기본소득 지급을 과감하게 먼저 할 것만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자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는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다. "굉장한 규모의 경천동지할 사건이 한 방에 터져서 모든 문제를 풀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수천 번의 작은 기회들을 단기적인 목표로 지혜롭게 이용하여 이를 장기적 진보로 쌓아올리는 편이 바람직하다."[17]

더구나 UBI 일부 논자들은 기본소득을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정책수단보다 사회주의 체제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위해 지식, 토지, 천연자원, 환경 등을 모두 공유자산으로 간주하여 이들로부터 배당금 개념의 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18] 이러한 주장은 공유화가 초래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배급'이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의 또 다른 표현- 이루어지고 점차 여기에 정치적 개입이 강화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 개인의 자유를 옥죄는 섬뜩한 수단이 되어 있을 것이다.

15) Banerjee, Abhijit V., Esther Duflo(2019), *Good Economics for Hard Times*. 한국어 번역본, 김승진 역,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2020, p.501, 503, 513 참조.
16) 이준구, 조명환(2021), pp.269~272 참조.
17) Van Parijs, Philippe, Yannick Vanderborght(2017), *Basic Income*. Harvard University Press; 한국어 번역본, 홍기빈(2018), 「21세기 기본소득」, 흐름출판, pp.562-563 참조.
18) 강남훈(2015), "새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12(2), 2015. 5,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pp.131~155. 그리고 정원호·이상준·강남훈(2016), pp.58~61 참조.

지난 50년, 향후 50년

배국환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지난해를 돌이켜 보고 한해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경제 주체들의 일반적인 연례 행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당국자들에게는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무섭게 다음 재정스케줄의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은 지난 12월21일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기재부 예산실은 연말연시에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새해 예산의 집행계획을 짜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를 서두른다. 이와 함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2024-2028년)의 연동 작업도 시작해야 한다.

차분하게 앉아서 깊은 연구를 하고 국내외 동향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재정당국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의 1년이나 5년을 뛰어 넘어 30년 내지 50년 후의 먼 미래를 보면서 재정을 설계 하는 일은 사실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오늘은 지난 50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예견해 보고자 한다. 과거에 대한 평가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지나간 50년을 올드 노멀(Old Normal)이라고 하고 다가올 50년은 뉴 노멀(New Normal)이라고 하자. 올드 노멀 시기는 한국의 베이비 부머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했던 때이기도 하다. 이제 그들 대부분은 일선에서 퇴진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50년 올드 노멀(Old Normal)

세계경제는 1970-80년대 오일 쇼크와 인플레를 힘겹게 견디어 내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선다. 물가가 안정되고 WTO 체제에서 인적 물적 자본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세계화의 물결이 대세를 이룬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는 시기였다. 이러한 요인에 힘입어 올드 노멀(1970-2022) 기간 중 한국경제는 연평균 6.4%의 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드디어 2016년에는 IMF가 인정하는 세계 10대 선진국의 반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세계는 소위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국가들이 주축이 된 G7, G20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인도와 같은 인구대국들이 노동시장에 편입됨으로써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상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세상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이 보편화 되고 생산·소비 등 모든 일상이 디지털화 됨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이 기간 중 이웃나라 일본은 전대미문의 버블경제가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왔다. 노인대국이 된 일본은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중이 급증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나쁜엔저' 로 인해 국가경제 전체가 늪에 빠져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경제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부채와 엔저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일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남의 불행이 우리에겐 기회가 되었다. 일본이 고전할 때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제조업에 기반한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에서 선도 주자가 되는 것이 좋은 전략이었다. 그들이 아날로그에 매달릴 때 우리는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했다. 대단한 쾌거였다. 우리는 코로나19 때 그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어느 순간부터 일본의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기 시작했다. 일본의 글로벌 기업인 SONY, 산요, 샤프, 도요타 등이 무너져 갔다. 그런데 최근 한국 경제가 일본을 닮아 가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고령화의 속도가 일본 보다 빠르다.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안심할 수 없다. 부동산 버블이 심하다... 등등

염려 되는 바가 없진 않지만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살펴 보기로 하고 오늘은 문제 인식만 하고 넘어가자. 올드 노멀 당시 우리 재정은 어떠 했을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잘 수행했던 모범생 이었다고 생각한다. 디테일하게 보면 잘 못된 부분들도 있지만 큰 줄기에서 볼 때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1997), 금융위기(2008), 코로나19(2020) 등 3차례에 걸친 국가경제 위기 때 마다 재정은 유감 없이 재정 본연의 역할을 잘 해냈다. 이 과정에서 재정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악화됨으로써 경고등이 켜지기도 했지만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재정은 이러한 경제안정화 기능 이외에도 복지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왔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올드 노멀 기간중 우리 재정은 국가채무· 큰정부/작은정부· 공기업민영화 등이 이슈화 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해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이 탄생함으로써 재정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향후 50년

뉴 노멀(New Normal)

앞으로 50년은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 왔던 세상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말 골드만 삭스가 2075년 국가별 경제력 예상 순위를 발표했는데 잘 믿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었다. GDP 규모로 세계 상위 5개국 중 서방국가는 미국(3위) 하나 뿐이었다. 1위 중국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다.

인도·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가 차지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가 전망 했듯이 미래 세계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와 자원을 무기로 한 이들 국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세계경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국제금융결제망도 달러 중심(SWIFT)에서 위안화가 주도하는 결제망(CIPS)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세계경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블록화 된 구조 속에서 중물가·중금리·저성장을 유지하며 자산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는 GDP의 350%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위기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닥칠 경우에 과거 처럼 과감하게 대처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경제 흐름의 변화]

	Old Normal 1970 - 2022	New Normal 2023 - 2072
무역환경	세계화	블록화
주도국가	Global North(G7, G20) + BRICS	Global West, South, East
대표기축통화 (국제금융결제망)	달러 (SWIFT)	달러+위안화 (SWIFT+ CIPS)
주도산업	IT, 반도체, 자동차	AI, 로봇, BIO,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거시경제	저물가, 저금리, 중성장	중물가, 중금리, 저성장
자산가치	상승	장기 하락

그러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떠할까. 미래 한국경제를 위협 할 수 있는 것은 인구문제와 국가부채라 할 수 있다. 우선 인구 문제를 살펴보자.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2022년 71%에서 2072년 46%로 급감한다는 통계청 발표(23.12)를 보면서 가슴이 매우 답답했었다. 노년부양비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다. 분자인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분모인 이 인구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들이 일당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실제 2072년 노년부양비는 104명이다. 2022년 24명 보다 4배 이상 늘어난다. 돈을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미래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일본 보다 23년 늦게 시작했을 뿐이다. 일본의 지금 모습이 우리의 20년 후의 모습이라면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엄연한 현실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 문제이다. 2023년 말 가계·기업·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부채는 총 6,000조원에 이른다. GDP의 280% 수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이다.

> 66
>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 구조적으로 빚이
> 빠른 속도로 늘어 날 수밖에 없다.
>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에 따른 각종
>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99

지난해 말 시공순위 16위의 태영건설이 PF 우발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것은 부실부채의 한 단면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1%만 올려도 경제주체들에게 60조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고금리 하에서 과다한 부채는 자칫 큰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 날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총부채에 연금재정 부채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국가부채는 무리하게 억지로라도 줄여서 대처해 나갈 수 있겠지만 인구변화 문제는 노력을 한다 해서 하루아침에 방향이 바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구를 인위적으로 적정수준 유지하는 일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총요소생산성을 가능한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경우에도 2040년대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0% 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상수로 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진다. 추가적인 노동과 자본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올리는 길 밖에 방법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재정운용의 방향은 분명해진다. 실효성 있게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되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계·기업·정부 모두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져야한다. 재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펫코노미와 구독경제

; 보유 효과만 노리면 손절을 당한다

조원경 UNIST(울산과학기술원) 교수/ 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교수의 저서 〈소유의 종말〉을 보자. 그는 "미래의 경제생활은 물건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서비스와 경험에 대한 접속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소유의 종말'이라는 개념은 상품을 구매하고, 재화를 소유하는 전통적인 실물 경제,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화두였다. 이제 현재 경제를 움직이는 큰 축은 소유에서 공유로, 공유에서 구독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추세이다. 정기적으로 렌탈하는 구독 서비스가 인기다. 구독경제란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유통 형태를 말한다. 맥켄지의 미국 소비자 대상 설문 결과를 보자. 온라인에서 쇼핑을 해본 사람 중 15%는 어떤 상품에 대한 구독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한다. 이는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업계는 치열한 곳이다.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을 단 한 번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과제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맞춤형 만족이 소비자에게 지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소비자는 언제든 해당 서비스와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혹시나 업체에서 꼼수를 부린다면 언제 구독을 해지할지 모른다는 말이다.

구독경제 제공자가 물론 노리는 것도 있다. 게으른 소비자들은 한번 구독하고 '웬만하면 그냥 있자'고 자신의 본능에 따라 소비하는 경우가 물론 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보유 효과(endowment effect)와 손실 회피(loss aversion) 성향이 있긴 하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내가 가진 것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유 효과'라고 한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 혹시 쓸데없이 괜히 바꿨다가 손해 볼 것에 대한 두려움은 또 어떤가? 이러한 손실 회피 성향이 합쳐져 현상유지편향을 만든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의 성향만을 노리다가는 큰일 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깔끔하게 떠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든 인지해야 한다. 공감을 저격하는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를 한 회사를 예로 들어 이야기해보자. 애견용품 구독서비스 업체 미국의 바크박스(BarkBox)를 생각해보자, 비혼이나 딩크 성향이 증가해 강아지를 자식처럼 사랑하는 이가 늘고 있다.

바크박스는는 매월 합리적인 수준의 구독료를 내면 매달 강아지 인형, 장난감, 사료, 간식 등 다양한 품목을 배송한다. 201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상당 규모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보유효과를 고려해 내셔널 도그 데이(Dog Day)를 기념해 12개월, 6개월로 구독할 경우에는 첫 번째 바크박스를 단 5달러에 제공하는 행사를 열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장난감 소재는 재활용 의류를 사용해 매월 새롭게 제작한다. 간식도 매월 테마를 정해 구 성한다. 바크박스 안에는 강아지의 즐거움이 되는 건 다 있다. 장난감, 간식, 뼈와 개껌 등. 개팔자가 상팔자란 생각도 든다.

바크박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견을 위한 제품군을 구성하는 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제품이 반려견에게 유해하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수의사도 있다. 반려견 크기에 따라 배송상자도 맞춤형으로 제작된다. 크기 외에 다른 요소도 고려해 상자를 만든다. 가금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강아지도 있고, 성격 때문에 내구성이 강한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강아지도 있다. 수의사를 위한 우버(UBER)도 있다. 수의사가 집을 방문해 진찰하는 반려동물 헬스케어사업의 일환이다.

바크박스같은 펫코노미(petconomy)가 뜨고 있다.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이코노미(economy)를 합성해 반려동물 시장과 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시장은 펫택시, 유치원, 장례서비스, 펫보험, IT 결합상품으로 진화했다. 주인이 죽으면 홀로 남겨질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상품도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실감나는 시대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도서 추천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시각을 책을 통해 배워보자.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정치와 경제를 한눈에 파악하는 경제학 지도

임주영(지은이) ● 민들레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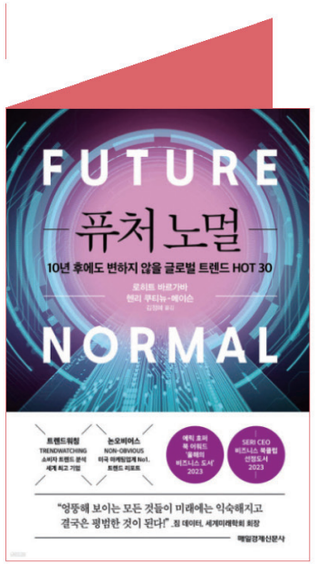
책 속으로

"정치와 경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도 1980년대 민주화 항쟁 이후 비로소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함께 갖추면서 대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 결과 오늘날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세테리스 패러버스'라는 말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수히 많을 때는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는 경제학 용어다. 경제 칼럼니스트인 이 책의 저자는 우리 주변에 세테리스 패러버스로 계산된 무수한 경제적 주장들을 들여다보며 사실에 근거해 낱낱이 반박해 나간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3조 3천억 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일자리가 6만 9천 개 감소한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것이다' '전두환 시절이 더 살기 좋았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이나 가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퍼주다가는 나라 살림이 거덜난다' '국민연금은 곧 고갈돼 못 받게 된다'…… 하나같이 익숙한 내용들이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잔인한 '대격차의 시대'를 마주한 지금, 각자도생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경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경제학에는 원래 정해진 답이 없다. 사람들은 경제학이 사회과학 범주에 속하고 주로 숫자와 데이터를 이론의 근거로 제시하니 마치 수학처럼 정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과 논쟁 이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안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제와 정치는 서로 맞물려 흐름과 방향을 같이하므로, 집권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정책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들,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정책,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사안, 심상치 않은 세계 동향 등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를 깐깐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그의 시선을 통해 언론은 알려주지 않는, 내 삶과 직결된 진짜 경제 이야기와 만날 수 있다.

퓨처 노멀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글로벌 트렌드 HOT 30

로히트 바르가바, 헨리 쿠티뉴-메이슨(지은이), 김정혜(옮긴이) ● 매일경제신문사

책 속으로

"우리 두 사람은 미래학 분야에서 '돌연변이'일지도 모르겠다. 무엇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많은 미래학자들과는 다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단골 질문은 두 가지였다.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변화가 인류의 미래에서 일부가 되기를 '바랄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에서 건설할 계획인 170킬로미터짜리 직선형 도시 라인(Line)은 또 어떤가. 무모하게 보이는 야심찬 대규모 프로젝트이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자동차 없는 도시 라인은 접근성의 끝판왕이다. 주민은 도보로 단 5분이면 지역의 모든 편의 시설에 다다를 수 있고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 최장 거리도 고속철도를 이용해 단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퓨처 노멀은 새로운 미래의 표준을 말한다. 지금 보기에 엉뚱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일상이 되는 트렌드다. 결국은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서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해지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들이다. 세계적인 트렌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전도유망한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로히트 바르가바와 헨리 쿠티뉴-메이슨은 머나먼 이상한 미래를 예측하는 공허한 상상이 아닌 앞으로 몇 년 안에 평범한 일상이 될 새로운 미래의 표준, '퓨처 노멀'을 소개한다. 두 사람은 전 세계 최첨단 실험실과 비공개 시험 시설을 방문했고 최신 제품의 사전 쇼케이스에도 참석했다. 또한 전신 햅틱 슈트를 착용해 보고, 초자연적인 홀로그램과 대화하고, 시제품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고, 배양육을 시식하는 등 혁신적인 미래 신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이 책은 30개의 흥미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소개하며 잠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저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퓨처 노멀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선도자(instigator)들을 가까이서 탐구하면서 얻은 통찰과 흥미로운 미래 비전을 우리와 공유한다. 이산화탄소에 기반한 단백질 생산, 자연을 도시로 끌어들인 녹색 마천루, 사익보다 공익을 실현하는 대기업, 생성형 인공지능, 탄소 투명성 확보 등 세상을 변화시키는 미래선도자들의 유용한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하다. 이 책은 미래의 일상을 규정하는 퓨처 노멀에 관한 이야기다. 세상은 바쁘게 움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수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DECEMBER

2023
12

재정

2024년 예산 확정

경제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2024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기획재정부, 12.21)

- 국회는 '23.12.21일(목) 15:00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
-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2조원 감액, +3.9조원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를 656.9조원에서 656.6조원으로 △0.3조원 축소
-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0.4조원 개선되어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

'23년 3분기 국민소득 (잠정) 발표 (한국은행, 12.5)

- (GDP) '23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과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각각 0.6%, 2.2% 성장
- (GNI) '23년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과 명목 국민총소득은 전기 대비 각각 1.6%, 0.5% 증가

1월

재정
- 2025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3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통계청 2023년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2월

재정
- 2023년 총세입 · 총세출 마감
- 2023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3월

재정
-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발표

4월

재정
- 2023년 결산 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 Outlook)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재정
- 2025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3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3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3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경제
- 통계청 2024년 1/4분기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6월

재정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7월

재정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 발표
- 통계청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 수정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update)발표

8월

재정
- 2025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재정
- 2025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발표
- 재정점검보고서 (Fiscal Monitor)발표

11월

경제
- 통계청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재정
- 2025년 예산 확정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지난 12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 및 ICT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보조사업이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한국재정정보원 박용주 원장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접어들고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한 곳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보조금 관리 및 노인 일자리 정책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이번 업무협약이 좋은 정책 협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고보조금이 우리 사회 곳곳에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사업공모, 집행, 정산, 점검 등의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
가족친화 우수기관(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지난 12월 19일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은 '18년도부터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유연 근무 활용의 활성화 등 일·가족 양립과 행복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률 증가,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구축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가족친화 우수기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박용주 원장은 "이번 표창은 일 · 가족 양립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행복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의 간단한 느낌을 적어
애독자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애독자 QUIZ

문제 세계경제를 네트워크으로 연결하는 국제금융결제망 중 하나로 달러 중심의 결제망(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어인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답 ☐☐☐☐☐

지난 호 정답 : **거시경제 외환정책**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010–****–*335
010–****–*135
010–****–*112
010–****–*526
010–****–*007

애독자 퀴즈 정답 &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 응모기간 2024.1.26. ~ 2024. 2. 15.

QR 코드로 접속해
응모해 주세요.